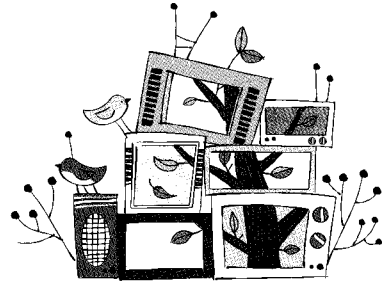


가전 개별소비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회장 윤중용)는 최근 정부의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방침에 대해 전자업계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면서 조세(개별소비세)정책의 방향전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0년 적용 예정인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소비자 및 산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개별소비세는 지난 2008년 이전 특별소비세로 운용됐으며 가전제품의 경우, 1999년과 2004년에 사치품에서 생필품으로 전환돼 내수진작 목적으로 과세 대상품목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개별소비세 도입의 취지는 '에너지 다소비'라는 개념으로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하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자업계는 이번 제도가 최근 경기침체 지속과 맞물려 소비자와 산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이번에 적용하려는 가전제품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소비량으로 보면 전체 1% 수준에

불과하며, 또 에너지 다소비라는 개념 적용에 있어서도 다소 모호한 기준으로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대형TV, 에어컨, 대형냉장고, 드럼세탁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번 규정의 경우 대부분 생필품화됐고 일반 혼수가전으로도 필수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품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전자업계에서는 고효율화에도 집중함으로써 가전제품 에너지효율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였으며, 향후에도 효율향상 및 대기전력 감소 등을 위해 5년간 약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전자업계의 계획에 사실상 찬물을 끼얹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와 달리 경쟁국의 상황을 보면, 중국의 경우 가전하향(家電下鄉), 이구환신(以舊換新)라는 경기진작 정책은 물론, 일본에서는 고효율제품 확산 및 경기진작을 목표로 정부 예산으로 디지털 TV 구입 보조금 및 에코 포인트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등 내수 활성화는 물론 전자업계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 보탬을 주는 모습과 상반된다.

KEA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 일환으로 준조세 성격의 기업부담금 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발표했지만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또 다른 부담금을 기업에게 안기는 상충된 정책"이라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또 "개별소비세를 가전제품에 부과하였을 때 가장 큰 부담은 소비자 부분이다"면서 "가전제품 구매심리 위축과 그로 인한 매출감소는 기업경영 악화는 물론, 더 나아가 중소기업체의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 제품가격이 최소 1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소비물가 상승은 물론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가정 전력사용량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 4개 품목에 내년 4월 1일 출고분부터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적용세율은 개별소비세 5%에 더해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붙기 때문에 실제로는 출고가격의 6.5%에 해당하는 세금이 매겨지는 셈이다. 친환경·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대형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9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4대 품목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제품에 5%의 개

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내년 4월 1일부터 5년간 한시적이다.

과세기준은 소비전력량으로 구체적인 품목 선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부 기준은 나중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TV는 50인치 이상, 에어컨은 25평형 이상, 냉장고는 700ℓ 이상, 드럼세탁기는 17kg(세탁용량) 이상이 유력하다. 정부는 당초 에너지효율등급을 기준으로 과세품목을 정하기로 했으나, 저효율 제품의 대다수가 서민들이 많이 구입한다는 점을 감안해 사용량 기준으로 바꿨다.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 과세 품목을 정한 뒤 내년 4월1일 공장 출고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출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대형 TV를 4월 5일에 샀더라도 3월 말에 출고됐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시행시기는 2015년 3월31일까지 5년간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소세 부과로 거둔 세금은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LED 조명을 설치하는 자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D 지원 확대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를 신설, 공제율을 세계 최고 수준인 20%, 25%(중소기업 30%, 35%)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기술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부문에 대해 2012년까지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예정대로 올해 말 일몰된다. 그 대신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의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2년까지 일몰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